초·재선 21명·3선 이상 13명 대상…현역 '컷오프' 칼바람

더민주 물갈이 공천심사 3단계 강화

지역구 여론조사 토대 평가
도덕성·청렴성도 정밀검증
공관위원 가부투표로 결정
내일 광주서 첫 후보 면접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3선 이상 현역 의원들을 겨냥한 정밀심사제를 마련하는 등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정장선 총선기획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경쟁력'과 '도덕성'을 정밀심사, 기준에 미달하는 의원들은 공관위 투표를 통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컷오프로 부적격자를 걸러내는데 그치지 않고 경쟁력과 도덕성까지 추가 검증해 모두 3단계의 현역 평가를 통해 교체폭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경쟁력 평가는 3선 이상 현역 의원 중 하위 50%, 초재선 중 하위 30%를 대상으로 실시한 뒤 공관위원의 가부투표를 실시해 과반수가 배제를 결정하면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쟁력은 현역 의원이 신청한 지역구의 여론조사 자료를 토대로 실사단이 준비한 현지 조사 보고서 등을 취합해 점수화된다.

공관위는 경쟁력 평가와 별개로 의원 전원에 대한 도덕성을 따지는 윤리심사를 진행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의원들에 대해 가부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현재 불출마자 8명을 제외하고 공천을 신청한 현역 의원 100명 가운데 초재선이 73명, 3선 이상 중진은 27명이다. 이에 따라 초재선 중 21명, 중진 중 13명이 가부투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공관위는 23일 컷오프 개별통보 이후, 25일 명단 공개 전까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공관위는 24일 광주를 시작으로 후보자 면접에 들어가기로 했다. 더민주의 전통적 지지기반이자 전략적 요충지인 광주에서 인적 쇄신의 바람을 일으켜 수도권 등 여타 지역으로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현역의원 면접은 경쟁력 평가를 위한 여론조사, 공관위원 가부투표 등 절차가 필요해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후보자 공천을 위한 면접을 '신상 비공개-정책 공개' 등 미국 인사청문회처럼 '투 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병역, 비리문제 등 후보의 도덕성·청렴성에 관련된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정책 역량이나 공약 등 전문성 분야의 면접은 공개로 하는 방식이다.

공관위는 전문성 못지않게 도덕성을 깐깐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부정부패 연루자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이 상당수 탈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공관위는 광주 이후에는 단수 신청 지역을 중심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단수후보 지역, 경선 지역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공관위는 주중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비대위원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이 22일 오전 마포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오늘 선대위 발족…신인 공천 늘린다

전윤철, 공관위원장 겸직
온라인 당원 가입 시스템 공개
千 "더민주 탈락자 선별 합류"

국민의당이 이르면 23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들어간다.

김한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22일 서울 마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준비를 마치고 빠르면 내일이라도 선대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또 전윤철 공직후보자격심사위원장 겸 윤리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을 겸직하도록 하기로 했다. 최원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가 추천관리위원회를 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외국에 있는 전 위원장은 국민의당 측과의 관계 이상설이 끊이지 않아 수락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총선에 신인을 최대한 많이 공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은 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 우리는 (현역)의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지역구에 새로운 인물들을 공천할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천과정에서 현역 의원과 신인 예비후보들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 호남만 하더라도 현역 의원이 없는 곳이 더 많고 수도권에서도 우리가 해 볼만한 지역구가 상당히 있다"며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신인들을 배치하게 되면 주목을 끄는 선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신인 가산점을 기존 최대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당규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입당 신청을 할 수 있는 온라인 당원 가입 시스템도 공개했다. 기존 정당과 달리 이미 당원인 사람이 중복신청할 수 없도록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한편,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이날 더민주당의 현역평가 하위 20% 컷오프 대상자 등 공천 탈락자들의 합류 문제와 관련해 "무능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탈락한 사람이냐, 아니면 패권과 싸우다 희생된 사람이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원칙에 맞게 하면서도 구체적 사례별로 봐야 할 것"이라며 '선별적 영입' 의사를 시사했다. 천 대표는 당초 "공천에 탈락해서 오는 분들은 같이 할 수 없다"며 이삭줍기 불가론을 편 바 있다.

천 대표는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도 "장애 요소가 사라졌으니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뉴 DJ'로 대변되는 새피 수혈을 강조하면서도 현역 물갈이와 관련, "기본적으로 우리 당 현역 의원 숫자가 워낙 적어서 더 잘라내는 게 쉽지 않는 측면이 있다. 호남도 광주 이외에는 아주 소수 아니냐"며 한발 물러섰다. 최근 의원총회에서 호남 현역의원들로부터 자신을 겨냥, "공천 관련 발언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항의성 요구가 연이어 제기된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다만 "광주 등 호남에서 현역 의원들의 프리미엄을 상쇄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공정한 절차를 연구해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저부터 면접을 포함해 남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모든 심사를 받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친인척·보좌진 비리 연루 배제 규정 완화

국민의당 '개혁 공천' 후퇴하나

국민의당이 21일 공천 신청자의 친인척이나 보좌진이 부정부패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을 경우 공천에서 원천배제하는 규정을 완화해 적용키로 하면서 '개혁 공천' 후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12일 친인척이나 보좌진 등이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천 후보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해당 조항을 적용할 때 '공천 신청자의 직무와 관련해'라는 문구를 삽입하기로 결정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마포 당사 브리핑에서 "후보자의 직무와 전혀 무관한 범죄를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며 "해당 규정을 좀더 세밀히 결정하면서 위헌 시비를 없애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변인은 "다른 당에 친인척이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있지만, 보좌진까지 포함하는 경우는 없다"며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이 조항을 통해 나타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결정은 원래 규정 적용시 일부 의원들이 공천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결국 정치개혁 의지가 퇴색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광주지역 모 현역의원 경우 과거 비서관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어 이 조항을 적용할 경우 공천 배제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대해 김영집 광주 남구 출마예정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부적격 변경은 관련 조항에 걸린 현역 의원들이 빠져나갈 출구를 만들어 준 특정 국회의원 봐주기"라며 "더민주에서는 현역 의원을 대거 탈락시킬 방침을 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현역들끼리 서로 봐주고 나눠먹으며 공천룰을 편법적으로 변경한다면 어떻게 혁신에서 이길 수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 관계자는 "이 규정이 처음 논의될 때부터 연좌제로서 위헌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그러나 이 조항을 없애면 정치혁신 의지가 약화됐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이라는 조항이 모호한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